

보도자료



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

발로 뛰는 윤명희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

TEL (02)784-4630 / FAX (02)788-0281 / E-mail : m567h@na.go.kr

[2015. 10. 12 (월)]

윤명희 국회의원

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

- 1. 초·중·고등학교 6,735개,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여 성범죄 위험에 노출 !!**
 - 얼굴 식별이 가능한 CCTV 평균 설치 비율은 경기 37%, 서울 31%에 불과
 - 여성가족부 '성범죄자 알림e 앱' 보급률 9.8%에 불과
- 2. 전국 147개소 새일 센터 중 농어촌 지역은 13개소 뿐 !!**
 - 2016년 새일센터 신규 지정 계획 예산 미확보 되어 신규 예산 확보 절실!! -
- 3. '소셜 데이팅 시장' 의 급성장으로 피해도 증가 !!**
 -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, 500명 조사대상 중 49.8%인 249명이 소셜데이팅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음
- 4.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도농격차 너무 커 !!**
 -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특성화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 지원 확대 필요 !!

초·중·고등학교 6,735곳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여 성범죄 위험에 노출 !!

- 얼굴 식별이 가능한 CCTV 평균 설치 비율은 경기 37%, 서울 31%에 불과 -
- 여성가족부 '성범죄자 알림e 앱' 보급률 9.8%에 불과 -

-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비례대표)은 여성가족부 및 산하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있는 초·중·고등학교 6,735곳이(전체 학교의 59%)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학생들을 성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은 허술하다고 지적 함
- 실제, 여성가족부 '성범죄자 알림e 앱'보급률 겨우 9.8%이며, 얼굴 식별이 가능한 CCTV 평균 설치 비율은 경기 37%, 서울 31%에 불과하여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 됨
- 더욱이, 학생 성폭력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2년 642건, 2013년 878건 2014년 1,429건으로 급증하고 있음. 아울러, 위탁형 대안학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임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 학교안전망 구축은 허술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여성가족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 것”을 강력히 주문 함

전국 147개소 새일센터 중 농어촌 지역 설치는 13개소(15%) 뿐 !!
- 2016년 새일센터 신규 지정 계획 예산 미확보되어 신규 예산 확보 절실!! -

-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비례대표)은 여성가족부 및 산하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가 현재 147개소가 운영되나, 농촌 지역은 13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2016년 예산 확보를 통해 농촌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 함
- 기존 사업만 계속하게 된다면 도·농간 여성복지,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초래하게 되어 2016년 신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농어촌 지역에 신규로 새일 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상황 임
- 농촌지역은 복지·일자리 등 서비스 전달이 어렵고 다문화가정이 많아,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군지역의 경우 총 82개 지역 중 69개 군에는 새일센터가 없음. 그럼에도 2016년 신규 지정 계획 예산은 미확보 되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여전히 새일 센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임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농어촌과 도시는 사회, 문화, 교육, 복지 등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” 말하면서 “2016년 새일센터 신규지정 예산 확보 등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고려한 농어촌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” 함

‘해외 데이팅 서비스’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어

성매매 온상, 적극적 조치 필요

- 500명 조사대상 중 49.8%인 249명이 소셜데이팅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음 -

-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비례대표)은 여성가족부 및 산하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‘소셜 데이팅 서비스’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는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함
- 실제,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500명 중 49.8%(249명)는 소셜데이팅서비스 이용 도중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함. 피해 유형으로는 소개 받은 이성으로부터 ‘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’ 이 24.4%로 가장 많았고, ‘음란한 대화 또는 성적 접촉 유도’ 23.8%, 사진 등 ‘개인정보 유출’ 16.0%, ‘금전 요청’ 10.2% 순임
- 해외 데이팅 서비스’ 경우 성인인증 없이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청소년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어 성매매 온상이 되고 있음. 실제, 여성 회원들은 올려놓은 소개 프로필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등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유해성 소셜데이팅서비스로 부터 청소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데 해외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”고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마련을 주문 함

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처 도·농 격차 너무 커 !!

- 대다수 농어촌지역,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진로체험처 5개 이하 !! -
- 2015년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예산 2011년에 비해 16.3%가 감소한 4.3억원 -

-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비례대표)은 여성가족부 및 산하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내년 전면 확대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 실태조사에서 진로체험활동의 기회와 다양성에서 도시·농촌 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함
-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‘꿈·끼를 키우는 교육’을 내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한 학기 동안 중간·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, 내년에 전면 시행 할 예정 임
-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진로체험처 실태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도는 진로체험처가 16개 이상이었는데, 농어촌지역은 5개 이하로 나타 남. 이에 농어촌 지역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적극 활용하고 지원해야 하는데,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예산은 2011년 개소 당 4.3억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은 3.6억으로 16.3%가 감소 함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농어촌 청소년의 경우 도시 및 수도권 거주 청소년 보다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도·농간 체험 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노력”을 당부 함